



F.B.I EXECUTIVE REPORT

ON GLOBAL BUSINESS AND ECONOMY



Hanyang Univ. School of Business

FOREIGN BUSINESS INTELLIGENCE



Contents November 21, 2012

Biweekly Report

- 2** As Coal Boosts Mozambique, the Rural Poor Are Left Behind
서지용, from The New York Times
- 6** Before and After Hu
김주찬, from Foreign Affairs
- 9** Facing Protests, China's Business Investment Slows
황철현, from The New York Times
- 12** How to Solve the Fiscal Cliff
김보미, from The Economist
- 15** Apple Told to Pay \$368.2 Million to VirnetX in Trial
김종삼, from Bloomberg Businessweek
- 18** Suzuki's Small Cars Were Wrong Fit in U.S.
현지윤, from The New York Times

Cover Stories & Special Report

- 21** For Richer, For Poorer
조경흠, from The Economist
- 27** Your Friendly Neighbourhood App
엄경인, from The Economist

As Coal Boosts Mozambique, the Rural Poor Are Left Behind

* 기사출처: [The New York Times \(2012.11.11\)](#)

* 요약자: 서지용 (jonglelsta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모잠비크, 광산업, 빈곤

“국가는 발전, 빈곤 퇴치는 제자리 걸음”

- 혼란스러운 역사에도 불구하고, 모잠비크는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됨
 - 모잠비크는 16년간의 내전, 마르크스 경제 정책의 실패 그리고 식민지의 잔재가 국가를 분열시켜 놓은 최빈국 중 하나
 -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연간 6% 이상 성장하며 아프리카의 사자로 불리고 있으며, 풍부한 천연자원이 성장에 기여
 - 모잠비크는 방대한 석탄 및 천연가스의 매장량을 앞세워 장기적인 경제 부흥을 계획 중
 - 세계은행은 모잠비크의 천연가스가 70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
 - 아프리카 남동쪽 해안에 위치하여 동남아시아의 높은 수요를 쉽게 충족시킬 수 있음
- 이러한 모잠비크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탄광이 들어서면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되었음

- 브라질의 최대 채굴업체인 발레(Vale)는 6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또 다른 거대 채굴업체인 리오틴토(Rio Tinto) 또한 석탄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었음
- 지역주민들은 탄광이 들어서면 자급자족의 농민 생활을 그만두고 탄광의 광부로 일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음
 - 또한 탄광 건설 기업이 그들에게 튼튼한 새 집을 지어줄 것으로 예상했음
-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잠비크의 부가 지역주민들에게도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에 차 있었음
 - 새로운 일자리, 주택, 교육, 나아가 무상 급식까지 완전히 새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했음

□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그들의 삶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

- 브라질 채굴업체 발레가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석탄을 얻기 위해 자원 매장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이주시킴
- 이에 따라 모잠비크가 바랐던 기적과는 반대로 지역주민들은 탄광에서 25마일 떨어진 곳으로 이주해야 했고,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
- 모잠비크의 발전은 분명하나, 이 발전이 특정 지역 및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

□ 모잠비크의 성장의 이면에는 아직까지 가난에 고통 받는 수많은 국민들이 존재

- 많은 자금이 모잠비크로 유입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또는 지속적인 성장은 부재

- 이러한 문제는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
 - 가봉과 앙골라의 경우,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음에도 극빈층의 비율이 증가
- 경제의 꾸준한 성장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지역의 주민들을 배제했으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
 - 현재 대부분의 모잠비크 국민들은 농업에 의존하여 살아가지만 상업적인 농업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

□ **한편, 일부 아프리카 국가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폭넓은 발전을 이루는 데 성공**


- 최근 유전을 개발한 가나는 철저한 빈곤 퇴치 계획으로 찬사를 받음
- 세계 최빈국이었던 보츠와나는 다이아몬드를 통해 중산층 국가로 변모
- 모잠비크도 천연 자원의 개척과 농촌 지역의 균형 잡힌 발전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길 바라고 있음

□ **하지만 이러한 결과물은 장기간의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잠비크의 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역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**

- 발레 관계자는 광업이 거주민들에게 즉각적인 부를 가져올 수는 없다고 주장
- 자급자족하던 농업 방식에서 상업화를 위한 농업으로 전환하는 일은 한 세대라는 시간이 걸릴 만큼 어려운 과제
 - 모잠비크 전국 농업 지부가 새로운 작농 기술을 전수하고 있지만 이는 많은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
- 또한 광업과 같은 거대 프로젝트들이 삶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오직 소수의 일자리만을 창출
 - 신규 투자로 인한 세금 수익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으며, 이는 세금 면제로 인해 발생한 것

□ 정부의 부족한 노력과 하늘바라기 농업으로, 국가는 발전하지만 시골 지역의 빈곤층은 여전히 가난에 허덕이고 있어 향후 국가정책의 방향이 중요

– 모잠비크 농부들은 밭을 태우고 씨를 뿌리며 비가 오기만을 바라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음

– 모잠비크 정부는 채광 산업 투명성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채굴로 발생하는 수익을 빈곤 퇴치 프로그램에 투자할 전망 

Before and After Hu

* 기사출처: [Foreign Affairs \(2012.11.07\)](#)

* 요약자: 김주찬 (kjcjuchan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후진타오, 시진핑, 정권 교체

“경제성장의 업적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남기고 떠나는 후진타오 정권”

□ 정권교체의 기로에 선 후진타오 정권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며 시진핑 정권은 이를 그대로 떠안게 될 것으로 보임

- 아래로부터의 사회적 평등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으나,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후진타오 정권과 충돌했다는 점에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수반됨
- 결국 후진타오 정권은 시진핑 정권에게 예전보다 전망이 어두운 경제환경과 불안한 사회적 기반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
 - 이는 경제성장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정치 권력, 경제적인 기회 및 자본의 흐름이 밀접하게 연관되는 점에 기인

□ 후진타오 정권의 가장 큰 업적은 GDP와 총소득, 수출의 증가로 드러나는 경제성장

- GDP 성장률이 급증하고 총소득의 증가가 두드러짐
 - GDP는 2002년 1.5조에서 2011년 7.3조로 증가
 - 1인당 GNI는 도시인구 기준 2002년 연 평균 1,000달러에서 2011년 3,500달러로 증가
- 또한 후진타오는 집권 전이었던 2001년 WTO 가입 전부터 중국의 성장과 자유무역에 대한 정치적 여론을 이끌어내는 데 일조하

면서 수출 증가 및 기념비적인 산업화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

□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은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여 성장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함

- 수출 증가를 위해 지나치게 해외 수요에 의존하고 내수 소비를 등한시
 -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수출 부문에서의 심각한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 6,000억 달러의 구제비용을 투입했으나 불균형 현상만 가중시킴
- 불균형적인 성장은 사회불평등을 초래했으며, 정치적인 사안으로까지 번지자 중국 정부는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공개를 금지
 - 증산층이 부상하였지만 불평등 문제는 더욱 심화됨

□ 또한 경제성장에 소요된 과도한 에너지와 불균형적인 소비구조가 문제점으로 제기됨

- 단기간 내에 산업화를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중국의 총 에너지 소비량은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으며, 2009년에는 미국을 추월
 - 이는 중국의 산업이 위험한 속도로 성장할 뿐 아니라,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음을 반증
-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, 석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심각한 환경오염 및 공중보건 문제를 초래
 - 석탄은 여전히 총 에너지 소비의 70%를 차지
 - 2011년 석탄관련 사망사고는 약 2,000건


□ 시위, 폭동, 폭력 사건 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불안정 및 복지문제 역시 문제점으로 대두됨

- 후진타오 정권이 집권한 2005년 이후, 최소 100명 이상 동원된 시위나 폭동, 기타 폭력 사건들이 약 9만여 건이나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불안한 분위기가 조성됨
- 또한 경제성장에만 집중적으로 자본을 투자함으로써 경제는 4배 이상 성장하는 동안 보건복지에 대한 정부 투자는 GDP 대비 4.8%에 그치는 미미한 수준

□ **외교분야의 경우에도 대만과의 관계발전과 같은 성공이 있는 반면, 동북아의 불안정한 상황을 조성했다는 점에서는 실패로 평가됨**

- 대만과의 관계발전은 두드러지는 성공으로 평가되는데, 특히 미국과의 군사적 마찰 위험이 있는 부분으로 현재 양국의 관계는 화해를 넘어서 경제적 통합 단계까지 발전해가는 상황
- 하지만 일본과의 갈등은 계속되고 지역 내 영향력 과시로 인해 미국을 자극시키면서 동북아 지역에 더 큰 긴장을 고조시킴

□ **후진타오는 시진핑에게 많은 숙제를 남기며 정권을 이양함에 따라 그 귀추가 주목됨**

- 나날이 증가하는 시위, 하위계층으로부터의 압박, 원자바오 총리를 포함한 고급 관료들의 불투명한 재산축적 등 사회적 불평등과 불안정은 정부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
- 과거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전제조건들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을 것으로 평가되며, 둔화되는 경제성장과 세계적으로 위축된 수요를 이겨낼 수출과 투자 및 성장모델이 필요
 - 파이는 더 이상 커지지 않을 것이며 성장보다는 분배의 중요성이 대두됨
- 높은 투명성과 법치주의가 동반된 개혁을 추구하는 정치적인 변화는 차기 정부가 당면 과제를 풀기 위한 필수 조건 

Facing Protests, China's Business Investment Slows

* 기사출처: [The New York Times \(2012.11.06\)](#)

* 요약자: 황철현 (chul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중국, 투자정책, 소비

“중국의 지나친 투자에 대한 대중의 반대시위 확산과 그 해법”

□ 쓰촨성 북부의 구리 제련소 시공식을 반대하는 시위에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하여 화제

- 중국 지역지도자들은 구리 제련소 시공식으로 2008년 대지진 이후 쓰촨성 북부의 실업난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
- 하지만 수천여 명의 젊은이들은 16억 달러 규모의 공장이 초래할 수 있는 환경오염 가능성을 문제로 삼아 시내 중심에서 반대시위를 일으킴
 - 환경오염 및 대중을 외면한 투자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반감이 확산됨

□ 중국의 막대한 투자 정책은 소득 수준의 향상 및 사회적 안정을 바탕으로 중국이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는 데에 기여

-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막대한 투자정책으로 경기발전을 이루었으며,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 수준을 높여 사회적 안정성을 향상시킴
- 이러한 투자를 바탕으로 중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


□ 하지만 국유은행을 통한 중국의 막대한 투자 확대는 생산 과잉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

- 중국은 지금까지 국유은행들로 하여금 국유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에 거액의 자금을 대출해주도록 하는 형식으로 투자를 활성화
- 그러나 과한 투자로 인해 사용되지 않는 시설들의 증가하면서 제조업 수익성이 마비되었으며, 생산 과잉으로 빛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증가
 - 2011년, 중국의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6%
 - 이는 1970년대 일본의 36%, 1980년대 한국의 39%보다 높은 수치
- 반면 중국 은행들은 제때 대출을 상환하도록 하기보다는 대출 상환을 연기해주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함
 -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대출을 받고, 경기 부양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투자 프로젝트에 문어발식 투자를 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

□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소비 진작이 아닌 투자에 의존하는 기존 경제정책을 고수

- 몇 년 전부터 경제학자들은 중국 정부에게 소비를 바탕으로 하는 지속적인 성장으로 정책을 바꿀 것을 권고해 옴
 -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통해 생산 과잉을 줄이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식을 제안
- 하지만 중국 정부는 더 많은 의료보험과 연금을 제공하여 자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높은 저축률을 유지하게 했고, 재정적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했음
 - 이로 인해 소비에 의존한 성장은 어려워졌고 막대한 투자정책은 계속 고수됨

□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중국 정부의 추후 정책은 미지수

- 지금까지 중국의 지역지도자들은 시위를 하기 위해 다른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는 태도를 보임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정책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열려있는 상태
- 대중들의 반대시위에 주의를 기울이고 투자 조성보다는 소비진작 정책 위주로 성장방식을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 새로 들어서는 시진핑 정부의 귀추가 주목됨 

How to Solve the Fiscal Cliff

* 기사출처: [The Economist \(2012.11.08\)](#)

* 요약자: 김보미 (everipe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세율, 세금개혁, 상한

“미국의 재정절벽 논란 지속”

□ 민주당은 세금 개혁안과 관련하여 진보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공화당과 대립해 미국의 재정절벽 논란을 지속

- 상원의원 팻 투미는 10년 동안 조세의 허점을 막아 250억 달러의 세수를 모을 것을 제안
- 그러나 이는 세율을 급격히 낮추어 부유한 가계에만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임

□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한데, 그 대안으로 세율 삭감에 대한 상한 지정이 있음

- 소득 상위계층의 세율은 중산층의 세율보다 더 분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
 - 그러나 이는 롬니와 존 베이너 하원의장 사이의 의견 충돌로 인해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
- 따라서 한계 세율에 대한 20% 삭감을 충당하기 위한 대안적 해결책이 절실하며 삭감에 대한 상한을 두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음
 - 이는 2011년 마틴 펠드스틴과 마야 맥퀸니스 그리고 다니엘 핀버그에 의해 제안되었던 것이기도 함

□ **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점은, 수입이 25만 달러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공제 상한에 대한 추정치가 없다는 것**

- 세금 정책센터의 항목별 공제 상한을 5만 달러라고 측정한 것을 통해 짐작은 가능
 - 이는 10년에 걸쳐 7,490억 달러를 거둬들인 것
 - 세율을 2001년 수준으로 돌렸을 때 산출될 수 있는 4,390억 달러보다 많은 수준
- 또한 이것은 누구의 세율도 올리지 않고, 자본 이득과 배당에 대한 특혜 비율도 보존한다는 것을 의미

□ **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의 상한은 실제 세금개혁 협상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**

- 그러나 오바마는 이를 제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는데, 이는 정치적 포인트를 얻을 기회를 희생하는 것이 민주당원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
- 오바마 재정은 공제 상한을 28%로 하기를 선호하지만, 문제는 이것이 강력한 선거구인 자선단체와 가게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


□ **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현재 미 의회에서 세금에 관한 합의는 절반만 이루어진 상태**

- 공화당은 지출 삭감을 동반하는 경우에만 높은 세금 수익을 수락한 반면, 오바마 대통령은 삭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공화당이 원하는 재정지원 혜택에 대한 삭감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음
- 중도적인 상한선과 의료복지 재정지원의 재량적 지출에 대한 삭감과 함께 미약하게나마 합의의 시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

□ 오바마는 당선 이후 재정적 결손에 대한 최종안 발표에서 열린 입장을 표명

- 심각한 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출 삭감과 수입 모두에 있어 노력이 필요하며, 이는 미국의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하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
- 또한 25만 달러보다 수입이 적은 사람들을 위한 부시의 세금 삭감은 연장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모든 협상에 대해 열려있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임

□ 그러나 아직 백악관의 언론 비서는 협상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함

- 대통령은 노동자의 상위 2%에 대한 부시 정권의 삭감정책을 확장하는 어떠한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언급
- 확실한 해결책은 주어지지 않았지만, 적어도 점점 더 불투명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것 

Apple Told to Pay \$368.2 Million to VirnetX in Trial

* 기사출처: [Bloomberg Businessweek \(2012.11.07\)](#)

* 요약자: 김종삼 (ddemshea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애플, 페이스타임, 특허전쟁

“버넷과의 특허전쟁 패배로 페이스타임에 발목 잡힌 애플”

□ 지난 6일 애플에 승소하면서 약 4억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된 버넷의 주가가 폭등

- 연방 배심원의 판결에 따라 애플은 가상 개인 네트워크(VPN) 통신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에 대해 약 3억 6,820만 달러를 버넷에 배상해야 하는 상황
- 이에 따라 버넷의 주가는 33.61달러로 상승, 2009년 7월 이래 일간 가장 큰 상승폭인 28%의 증가를 기록
 - 올해 버넷의 시장가치는 특허소송 보상금 수익의 영향으로 35% 상승한 17억 달러로 평가됨

VPN (가상 사설 네트워크)와 페이스타임

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활용해 VPN 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웹사이트 소유자들이 고객과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는 기술이다. 기업 종사자들이 집에서도 회사의 전자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, 미국 CIA 의 통신 보안 개발을 위해 SAIC 에서 개발한 것에 유래를 둔다.

페이스타임(FaceTime)은 애플이 개발한 영상 통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통신 규약을 이야기하며, iOS 를 구동하는 모바일 장치 중 지원하는 기기와 맥 OS X 스노 레퍼드 이상의 버전을 구동하는 매킨토시 컴퓨터에서 지원된다. 페이스타임은 전면 카메라가 있는 모든 iOS 기기 (즉, 아이폰 4 이후로 발매된 모든 iOS 기기) 상과 웹캠, 특히 페이스타임 카메라 (FaceTime Camera, 이전의 아이사이트 카메라)가 장착된 매킨토시 컴퓨터에서 지원된다.

□ 버넷의 특허 기술은 애플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과도 특허소송이 진행 중


- 지난 2010년 버넷은 같은 특허 기술분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2억 달러를 보상받음
- 유사한 문제로 시스코, 어바이어, 지멘스와의 특허재판이 3월에 예정되어 있음

□ 승소의 근거는 애플의 페이스타임이 버넷의 통신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것인데, 애플은 이를 부정

- 평결을 내린 연방 배심원들은 아이폰, 아이팟 터치,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맥북에서도 사용 가능한 애플의 페이스타임 기능이 버넷의 기술특허를 명백히 침해했다고 판단
 - 버넷은 이 특허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약 708만 달러로 추정
- 그러나 애플은 페이스타임에 사용된 기술이 버넷의 특허에 포함된 것과는 다른 기술이라고 주장하며 반박
 - 애플의 변호사는 "만약 버넷의 기술이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크고 복잡한 제품의 극히 일부분일 뿐"이라며 특허 침해를 부인

□ 승소판결 이후 애플과 버넷이 각각 항소와 추가적인 소송을 준비하며 특허전쟁이 점점 가속화됨

- 애플은 여전히 자신의 제품들이 버넷의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음
 - 그러나 전문가들은 애플이 항소하더라도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
- 한편 버넷은 애플에 승소 후 곧바로 같은 특허를 가지고 아이폰5와 아이패드 미니, 5세대 아이팟 터치, 최신 맥북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특허소송을 준비 중

- 버넷의 CEO는 “이 승리는 우리 특허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을 더욱 확고하게 할 것”이라는 성명을 발표
- 전문가들은 이미 버넷이 승소를 거두었기 때문에 애플이 추가적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 

Suzuki's Small Cars Were Wrong Fit in U.S.

* 기사출처: [The New York Times \(2012.11.06\)](#)

* 요약자: 현지윤 (ozma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소형차, 스즈키, 시장 철수

“오랜 고민 끝에 북미 시장 철수를 결정한 스즈키, 그 과정과 전망 분석”

□ 소형차를 주력제품으로 내세우는 스즈키는, 본국인 일본에서 해당 부문의 선두주자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해 옴

- 소형차는 차량과 엔진 크기, 마력 등이 조세 우대정책에 부합하며, 좁고 복잡한 일본 도로에도 적합해 일본에서 인기
- 이러한 환경에서 스즈키는 소형차 제품을 통해 일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
 - 스즈키의 '왜건 R'은 지난 10월 도요타의 '프리우스 하이브리드'와 비슷한 판매량을 기록

□ 그러나 북미 시장에 진출했던 스즈키는 최근 북미 시장 철수를 결정

- 11월 5일 미국 내 자동차 판매를 중단하고 현지 법인에 대해 파산을 신청
 - 당시 스즈키의 북미 법인은 3억 4,600만 달러의 부채를 떠안은 상태
- 재고 차량은 자동차 딜러를 통해 판매하고 교체용 차량 부품은 계속 공급할 방침

□ 스즈키는 지난 1985년 미국에 소형 오프로드 차량을 출시하고, GM과의 제휴를 통해 북미 시장 진출의 기반을 다짐

- 1985년 저가 오프로드 차량 '사무라이'를 출시하고 3,000만 달러를 들여 대대적 마케팅을 시행
- 이후 다수의 소형차를 출시하고 GM과 제휴를 맺어 북미 시장 침투를 시도했으며, 그 결과 2000년대 중반 스즈키는 10만 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성장을 시작

□ 그러나 2000년대 중반 글로벌 금융위기가 스즈키의 북미 사업에 타격을 주며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


- GM이 스즈키 보유지분을 매각해 제휴 관계를 청산했고, 일본 업체와의 캐나다 공장 합작설립도 무산됨
-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12년 10개월 간 판매량은 21,000대에 그침

□ 결정적으로 소비자 선호도 부족, 엔화 강세, 극심한 규제와 유통비용 등이 스즈키의 북미 시장 철수 요인으로 작용

- 미국 시장은 중대형 차량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소형차 위주의 스즈키에 불리하며, 스즈키는 신뢰성과 브랜드 이미지 관리에 실패
- 엔화 강세로 인해 차량을 일본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운송하는 방식에서 마진이 감소
- 미국의 엄격한 규제에 의한 비용과 차량 유통 시스템 유지 및 확보 비용도 부담을 가중

□ 외부에서는 스즈키의 이번 결정에 대해 기업 자원 활용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

- 기업 자원을 신시장 역량 강화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

- 이번 발표 직후 일본 닛케이 지수가 0.36% 하락한 데 반해, 스즈키의 주가는 0.65% 상승해 시장의 기대를 반영
- 앞으로 스즈키는 인도와 동남아 등 신흥시장에 경영 자원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
 - 스즈키는 지난 수십 년간 저가 소형차를 통해 이 지역에서 빠르게 자리잡은 바 있음 

For Richer, For Poorer

* 기사출처: [The Economist \(2012.10.13\)](#)

* 요약자: 조경흠 (polarbear5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소득 불평등, 사회 이동가능성

“소득 불평등의 시대별 양상과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”



Michael Morgenstern

□ 과거 국가 간 소득 불평등은 변동 형태에 있어 산업 혁명 이전과 이후에 뚜렷한 차이를 보임

- 산업혁명 이전 국가 간 부의 격차는 어느 정도 존재했으며, 각 국가 내 소득분배는 계층별로 치우친 형태를 보임
 - 가장 부유한 10개국의 1인당 소득은 가장 가난한 10개국의 소득보다 6배 높은 수치에 불과
 -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수 엘리트 계층만이 수많은 하인을 거느렸으며 결혼을 제외할 경우 사회 이동성은 존재하지 않았음
-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에는 국가 간, 국가 내 소득격차가 모두 심화됨
 - 서유럽과 미국의 경제는 급성장하는 반면 다른 국가는 정체되어 격차 발생
 - 도시 노동자가 농촌 노동자에 비해 더 많은 소득을 벌었으며, 독점력과 정실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제철소와 철도 등 거대 기업이 등장

□ **하지만 산업 노동력의 증가로 정치적 압박이 발생하여 평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고, 이에 국가 내 소득격차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**

- 이러한 요구의 가장 극적인 사례는 공산주의의 등장이며 자본주의 역시 변화를 모색
- 노동조합과 사회주의 정당이 생겨났으며, 대공황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누진세, 정부 규제, 사회보호제도를 도입
 - 1880년 비스마르크는 연금과 실업보험을 도입, 루즈벨트는 뉴딜정책을 통해 사회보장책 도입, 영국은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와 상속세를 증가시킴
 - 또한 공교육의 강화, 소득 이전, 반트러스트, 근로자 권리의 법적 보호를 통해 사회적 이동성 증가와 평등을 도모
-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이 상류층보다 빠르게 상승하여 이른바 '대압착(The Great Compression)'의 시대가 도래

□ **그런데 1980년 이후 세계화, 탈규제, IT혁명 등으로 소득격차의 심화는 이전과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**

-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처럼 신흥 경제의 대다수가 기존 부국보다 빠른 성장률을 보이며 전세계 불평등은 감소하기 시작
- 세계화는 시장 규모의 확대와 보상 수준의 증가를 달성하고 신기술은 고학력 노동자의 수요를 증가시킨 반면, 비숙련 노동자는 경쟁으로 내몰림으로써 국가 내 불평등은 상승
 - 정치인들은 세계화를 불평등의 원인으로 비판하지만, 경제학자들은 숙련편향적(skill-biased) 기술 변화가 국가 내 임금 격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판단
- 하지만 기술과 세계화 두 요소는 분리가 점차 어려워져 구분이 모호해짐
 - IT혁명은 세계 시장의 통합을 촉진시켰으며, 동시에 신흥 경제는 현재 많은 기술혁신의 원천

□ **과거를 통해, 시장과 사회적 세력(social power)은 서로 단절될 수 없으며 정부 역할의 확대 없이도 불평등의 감소가 가능하다는 교훈을 도출**

- 세금 개혁, 복지 프로그램, 정부의 규제는 20세기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필요했으며, 만약 이런 조치가 없었다면 소득 분배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
- 또한 가장 눈에 띄는 소득격차의 감소는 작은 정부에서 비롯되었으며, 규모가 크고 엄격한 복지국가는 지속이 힘들다는 것이 증명됨
 - 1930년대 정부들은 세수 증대를 통해 엄청난 재정지출에 대응하였으나, 높은 과세율 그 자체로는 소득분배를 바꾸지 못함

□ **하지만 오래 전부터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반되는 의견들이 존재**

- 100년 전만 하더라도 불평등은 성장의 필요조건으로 여겨졌으며 재분배는 오히려 비효율을 가져오는 것으로 인식됨
 - 부자들의 저축을 통해 자본 축적이 가능했으며 불평등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유인을 제공
 - 높은 세금과 정부 보조금은 열심히 일할 유인을 억제하며 큰 정부는 더 큰 경제 왜곡을 유발
- 하지만 불평등이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다음 세대의 기회 불평등 증가, 사회 이동가능성의 감소로 이어졌으며 이는 경제성장을 더디게 함
 - 큰 소득격차가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 국영기업의 독점, 초거대 기업의 효율성 하락과 같은 왜곡이 경제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불평등을 증가시킴
 - 소득 격차가 작은 국가 역시 불평등이 존재하는데, 수많은 복지 정책에 대한 정부지출은 경제성장을 저해

□ 불평등은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으로 주장되기도 했으며, 불평등이 사회적으로 증가하면서 정치적 이슈로 부상

- 기존 자산 버블과 저렴한 신용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것은 오히려 무모한 모기지 대출을 부추겨 금융위기를 초래
 - 자본가들은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되었고, 대출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이 돈을 빌릴 수 있게 됨으로써 위기를 자초
- 또한 금융위기 해결 과정에서 은행은 구제를 통해 위기를 탈출했지만 시민들은 집과 직업을 잃는 모순이 발생하였으며, 불평등과 금융 시스템의 불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
 -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소득 분배도 절대적·상대적 측면에서 모두 악화됨
 -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는 위의 모순을 확실히 드러내는 증거
- 지난 3년간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는 정치인들의 '할 일 목록(To do list)'에 없었지만 최근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했으며, 정치적 논점을 좀 더 보수적으로 옮김

- 이번 미 대선에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상승 논의가 주요 쟁점이 됨
- 프랑스의 새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는 최고 소득세율을 75%까지 상승시킬 것을 원함
- 불평등에 관한 논쟁은 정치적 관점을 막론하고 무엇이 공정한지, 공정성과 효율성 사이의 올바른 균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화두를 제시

□ **효율성과 불평등 모두를 개선하기 위해 소수의 정실인사(Cronyism)를 억제하고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법이 필요**


-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많은 신흥국가들은 과거 루즈벨트가 했던 것처럼 트러스트를 해소하고 뇌물 등 정치적 부패 단속을 강화해야 함
- 중국의 경우 광산, 철도 등 주요 국영 독점체제를 없애고 시장주도 이자율과 보다 자유로운 금융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소득집중과 경제왜곡을 줄일 수 있음
- 선진국들은 대마불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없앴으로써 더 균형 잡힌 경제로 나아가야 하며, 전통적으로 과잉보호하고 있는 분야는 경쟁을 좀 더 촉진시켜야 할 것

□ **또한 사회적 비용 지출에 있어 더욱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해 우선적으로 불평등을 제거하고 사회 이동가능성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**

- 사회안전망의 경우 조건부 소득이전 등 수혜자에게 맞는 정책을 구사해 보조금 낭비를 막고, 사회적 지원 역시 개인의 능력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효율적으로 결부시킬 필요가 있음
 - 부국과 빈국 여부와는 관련 없이 현재 선진국의 연금제도와 건강보험제도는 지속 불가능한 형태이므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

- 교육 역시 현재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유아와 비 숙련 노동자의 교육에 대한 공공투자를 증가시켜 사회적 이동성 증가를 꾀할 필요가 있음
 - 미국은 비 숙련공 재교육에 GDP 대비 0.1%의 금액을 사용하며, 이는 OECD 평균인 20%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
 - 중국은 2020년까지 유아교육참여율을 70%로 끌어올릴 계획

□ 마지막으로 단순한 고소득층 한계세율 인상이 아닌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금제도를 위한 개혁이 필요

-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높은 한계세율은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며 대다수 국가에서는 정부지출이 세금보다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됨
 - 하지만 재정상태가 엉망인 상황에서는 더 많은 세수확보가 필요할 수도 있음
- 따라서 세금체계의 효율성을 낮추는 왜곡을 제거하는 데에 혁신과 개혁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
 - 사모펀드 매니저의 경우, 성과보수를 자본이득으로 간주하여 15%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'성과 보수 구멍' 현상이 나타나 비효율이 존재
 - 자선 공헌, 대출이자와 같은 많은 세금공제 제도를 축소할 수 있으며 높은 재산세는 효율적이고 꾸준한 세원이 될 것
 -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수혜자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과세단위로 하는 제도로 바꾸어 부를 골고루 분배하며, 사회적 이동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

Your Friendly Neighbourhood App

* 기사출처: [The Economist \(2012.10.27\)](#)

* 요약자: 엄경인 (biteki723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스마트폰, 앱, 서비스

“스마트폰 앱을 통한 서비스의 발전”



□ 오픈테이블(Open Table)은 지역 기반으로 온라인을 통해 식당 예약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체

– 오픈테이블은 식당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던 1998년부터 이 서비스를 도입

- 식당에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도록 설득하고, 하드웨어 또한 공급
- 지난 14년간 북미를 넘어 독일, 일본, 영국 등으로 확산됨

– 식당은 월 199달러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오픈테이블 웹사이트를 통한 예약이 이루어질 때마다 좌석당 1달러의 인센티브를 받음

□ 오픈테이블과 같이 온라인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지역 기반 서비스산업은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인해 크게 변화

- 스마트폰은 근거리에서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강력한 휴대용 기기로서, 지역을 기초로 주위에 관한 모든 종류의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
 - 미국의 주요 대도시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확장하는 추세
 - 스마트폰 사용 확대로 오픈테이블 예약의 28%가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짐
 - 지역 서비스들을 목록화하고 리뷰하는 서비스업체 엘프(Yelp) 역시 이용자 중 25%가 모바일 앱을 이용
-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정보가 배열되고 제공됨에 따라, 지역 내 상점 할인부터 식당 예약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

□ 이러한 서비스들은 세 가지 주요 특징을 갖는데, 그 중 첫 번째는 지역 내 사용되지 않고 낭비되는 공급을 수요와 연결시키는 것

- 오픈테이블은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앱을 통해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어디인지, 또 그곳에 언제 자리가 나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
- 택시업체 우버와 하일로스는 스마트폰을 통해 가까운 곳의 이용 가능한 택시를 보여주고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추정하는 서비스를 제공
 - 우버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해 보스턴, 시카고 그리고 토론토에서 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리무진까지 제공

- 하일로는 택시 앱 더블린을 통해 보스턴과 토론토에서 우버와 경쟁
- 여행객들에게 머물 수 있는 방을 알려주는 업체인 에어비앤비 또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
 - 대부분 여행객들은 여행 전에 머무를 방을 예약하지만, 에어비앤비 앱을 통해서는 여행지에 도착했을 때 방을 구해도 늦지 않음

□ 두 번째 특징으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SNS라는 점

- 사용자와 그의 친구를 연결하는 SNS의 특징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
 - 사용자는 현재 머물고 있는 카페와 바 등 여러 장소들을 그의 친구들에게 알리기 위해 '체크인'을 설정
- 또한 SNS를 통해 가상 공동체를 만들어 주위 이웃들을 쉽게 만날 수 있고, 이는 물리적 사회 내 관계를 더 튼튼하게 함
 - 넥스트도어는 1년에 5,000개 이상의 가상 공동체 네트워크를 세우면서 정보를 빠르게 공유
 - 공동체 이웃들 간의 소통 주제는 범죄율이나 배관공 선택 등 광범위한 공통의 관심사

□ 세 번째 특징으로는 지역 정보 제공, 서비스의 검색과 목록화를 들 수 있음

- 옐프는 온라인 지도와 고객이 작성한 리뷰를 웹사이트에 연결하여 정보 제공
- 집을 구매할 경우 트롤리아와 질로우 같은 부동산 정보 앱을 통해 어디에서나 검색이 가능
- 포스퀘어 역시 회원들의 체크인과 추천으로부터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해 장소를 제안

□ 이러한 특징을 갖는 지역기반 서비스는 대도시에서 최대한으로 활용 가능


- 이러한 서비스의 영향력은 네트워크 공급자와 사용자의 활용능력에 대부분을 의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도시에서 최대한으로 활용됨
- 오픈테이블 서비스 역시 대도시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됨
 - 샌프란시스코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다수
 - 식당과 택시 등 여러 가지 서비스업 또한 많이 존재함에 따라 지역 기반 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

□ 또한 이러한 서비스는 대량의 유용한 데이터를 발생시키고 네트워크를 강화시킴

- 공급자들은 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서비스를 발전시킴
 - 하일로의 택시기사들은 그들의 일일 이동 범위와 승객들을 기록하고 앱을 통해 그들이 언제 어디서 돈을 버는지를 알 수 있음
 - 오픈테이블을 사용하는 식당 또한 누가 정기적으로 언제 찾아오는지 알 수 있으므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
- 특히 사용자 개인들은 서비스에 대하여 평가와 리뷰를 하고, 이러한 내용들이 개개인의 지인들에게 널리 퍼지며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됨

□ 최근 지역 기반 서비스들은 페이스북과 구글을 통해 더욱 발달되고 확산됨

- 약 700만 개의 서비스업체들은 페이스북의 페이지를 만들어 잠재적인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
 - 네트워크 내 1억 명의 회원들은 나이, 성별, 기호 그리고 지역 등에 의해 분류됨으로써 광고의 주 타깃이 됨

- 구글의 미션은 세계의 모든 정보들을 목록화하고 온라인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
 - 강력한 검색 엔진, 3만 3천여 명의 구글러, 그리고 세계 지도 등의 장점들이 더해지면서 구글은 지역 기반 서비스들을 더욱 발전시킴 

FBI는 한양대 경영대학의 비상업적 지식봉사 동아리로, 본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/경영 이슈에 대한 교내 상호 학습을 위해 동아리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. 만약 외부에서 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, 교외 지식봉사차원에서 무상으로 공유하고는 있으나 다른 상업적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

한양대학교 경영대학

보고서 구독신청 및 변경 (fbi.hanyang@gmail.com)

Advisor: 이웅희,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(victory@hanyang.ac.kr)

Editor in Chief: 김한결 (rocky87@hanyang.ac.kr)

Associate Editor: 박나현 (nh313131@hanyang.ac.kr)

Copy Editor: 김시연 (rea1200@hanyang.ac.kr), 김지연 (jiyeon7303@hanyang.ac.kr), 이창석 (laims2@hanyang.ac.kr)